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주시, 25개 관계 부서·35개 동 참석 대책회의 가져... 인명피해 제로·재산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13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 부서장, 35개 동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수립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부서별 사전 대비 사항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계획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 폭염 등 재난 양상이 복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먼저 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심으로 단계별 상황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동 주민센터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장에게도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동 단위까지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114개소를 지정·관리하는 한편, 산사태·하천·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도 완료했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 부서장, 35개 동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 시는 본격적인 위기 전까지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정비를 마무리하고,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주요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운전을 통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또, 동별 주민 대피계획 수립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 참여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폭염 분야의 경우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

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폭염 대책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 체계 개편에 발맞춰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열대야주의보 시에는 야간 무더위특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계층 1만5857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417명)를 통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평시 주 1회 방문에서 폭염 특보 시에는 1일 1회 확인 체계

로 전환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키로 했다.

여기에, 시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냉방바우처를 지급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 또, 건설 현장 및 영농 작업자에게는 폭염 취약 시간대(오후 2시~5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

시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풀링포그와 그늘막, 스마트승강장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SNS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통장과 자생단체 등 현장 인력을 통한 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전파 등 시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난 대응은 '보고 보다 행동'이 우선이며, 동장과 현장 공무원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통제와 대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해달라"면서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을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역량 강화

전주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 실시

전주시는 13일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역소각장과 공공하수처리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 등 폐기물 관련시설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지난 2024년 8월 한법재판소의 한법불일치 판결에 따른 정부의 '2035년까지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 재설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 폐기물 관련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각종 활동자료 준비 및 장비 점검정 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025년도 사업장별 운영 결과(안) 및 대응 방안 △4차 계획기간(2026~2030)의 연도별 감축목표 및 운영 방안 △주요 이슈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

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의미한다.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듬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시장 장 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4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노후 기계·설비 교체율 대비 교체 △폐열 회수 △고효율 전등(LED) 교체 △시설 운용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장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배출권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16일~7월 31일 1800명 대상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여부를 조사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서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규모가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그동안 해마다 전주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완산구·덕진구



각각 900명씩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임한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폭넓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이며,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 기반 전자조사 방식(CAPI)을 활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선정 가구에는 조사에 앞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의료이용, 예방접종 및 잠진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등 총 18개 영역 168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를 통해 산출된 건강통계자료는 지역 보건 정책 수립과 사업 성과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사원은 조사원 조끼와 전주 시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착용하고 방문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에서 급전적 요구나 조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소년 응원 캠페인 전개

전주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심기봉)는 13일 전주시신중학교에서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나를 응원해!' 한마디 PICK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응원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 PICK'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제시된 응원 문구 중 가장 공감되는 말을 선택해 스티커를 붙였다. 이어 '행운의 포춘쿠키 뽑기'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권희성 기자

전주역 주차장, 19일 타워크레인 해체로 운영 중지

전주역 고객주차장이 전주역 증축공사로 인해 오는 19일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전주시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전주역 증축공사에 따른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으로 인해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전주역 증축역사 우측과 선상연결통로 공사 등에 사용된 타워크레인 장비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주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작업은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역 고객주차장을 운영 중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장 운영 중지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운영 중지로 인한 차량 혼잡 등에 대비해 당일 주차장 입구에 현장 안내 요원을 배치해 동부대로 교차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역사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 KTX 개통 후 지속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증축(지하 1층~지상 3층)과 주차시설(602면) 및 광장 교통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증축역사 우측과 선상연결통로, 후면주차장(382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6월 중순이면 임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모든 공사는 나머지 증축역사 좌측 구간과 전면광장, 기존역사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